

考古學誌 연구윤리 규정

제정 2018. 9. 21.
일부개정 2021. 2. 15.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하는 학술지 『考古學誌』(이하 ‘고고학지’라 칭함)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 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고학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(이하 ‘부정행위’라 칭함)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,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“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”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중복게재”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⑤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4조(설치)

고고학지에 투고된 원고의 연구논문의 위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·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를 둔다.

제5조(구성)

- ① 위원회는 게재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소집되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구성되며,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편집위원회 중에서 5인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되, 해당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고 논문 필자와 동일 소속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은 제8조, 제3장 제10조, 제11조에 따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- ① 고고학지와 관련된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
- ② 고고학지와 관련된 연구윤리에 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심의
-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

- ④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. 단,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권한과 책임)

-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, 혐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장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

제9조(심의 요청 및 조사)

- ① 고고학지 게재 원고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고 하더라도 게재 원고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② 위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.

제10조(비밀엄수)

- ①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. 또한 부정행위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.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.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척, 기피, 회피)

- ① 위원회의 위원이 피조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,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.
- ②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, 해당 위원은 당해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.
- ③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재조치)

-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주의 환기, 비공개 경고, 공개 경고, 시정 권고, 원고 투고의 제한, 게재된 원고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·판정된 원고의 제1저자는 의결일로부터 3년간 고고학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이미 게재된 원고는 고고학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박물관 홈페이지 및 다음 권(호)을 통하여 공지한다.
- ③ 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, 원고명, 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3조(결과 통지)

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14조(이의 신청)

-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
부칙(2018.9.21.)

- 1. 본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하며 고고학지 제24집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21.2.15.)

- 1. 본 규정은 고고학지 제27집부터 적용한다.(일부개정 2021.2.15.)